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1090
----------	------

발의연월일 : 2005년 3월 18일

발 의 자 : 서순보 의원 외 16인

1. 주문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은 자명하며 특히 우리의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 및 주한 일본대사의 망언은 우리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분명한 침략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종로구의회 결의(안)을 채택함

2. 제안이유

-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에 대한 규탄
-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의 “독도는 일본의 영토” 라는 망언에 대해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일동은 18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3. 결의(안) : 별첨 참조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1996년 2월 16일 일본국의 독도 망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결의문 낭독 및 규탄대회를 가진바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안) 통과,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의 독도 영유권 망언 및 역사 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는 18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규탄 하며 독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총리 및 주한일본대사의 독도 망언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깊이 사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전쟁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18만 종로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우리는 우리 정부가 형식으로 가둬 찬 “한일 우정의 해”를
파기하고 문화·경제 등 모든 교류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온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방관적, 묵인적 자세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 할 것을 천명한다.**

2005. 3. 1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